

“친노 패권 청산 없이는 최고위원 복귀 안해”

새정치 최고위원 사퇴선언 2개월 주승용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 갈등이 좀처럼 수습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실종에 신당을 향한 당내 원심력이 커지면서 분열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주장하며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박차고 나간 주승용 의원의 빈자리가 커 보인다. 주 의원은 재보선 결과에 대해 지도부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4월 30일 “패배의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광주일보는 28일 주승용 의원을 만나 계파 갈등 해소 등 당내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 최고위원 사퇴 2개월이다. 복귀하지 않을 것인가.

▲ 이미 사퇴했다. 반복하기 어렵다. 친노 패권주의 청산이 가시화되지 않는 등 복귀 명분도 없다.

-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을 강행했다.

▲ 문재인 대표가 친노의 수장이다. 최 의원의 강성 범친노로 분류된다. 형평성 있는 공천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사무총장의 모든 공천 기구 배제’를 선언했다.

▲ 사무총장이 배제되더라도 누군가는 간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꼽수라는 지적도 있다. 문 대표와 김위원장이 교감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 재정권과 인사권

최재성 사무총장 ‘범친노’

형평성 있는 공천 어려워

정치적 지분 인정해야

당내 갈등 치유된다

을 갖고 있는 사무총장이 공천에 전혀 간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의 구조상 이뤄지기 어렵다. 최 의원 스스로 사퇴 결단이 필요하다. 이대로 간다면 갈등 구조 해소가 어렵고 봉합도 오래가지 못한다. 곁은 결코 살아 되지 않는다.

- 문 대표의 리더십을 평가한다면.

▲ 4·29 재보선 참패가 내년 총선에 쓴 약이 돼야 하는데 수습 과정을 보면 실망스럽다. 정치를 모르는 것인지, 참모진이 제대로 하는지 의심스럽다. 문 대표가 ‘주요 당직을 비주류에 양보했는데 사무총장 인선도 못하느냐’는 반응을 보이는데 현실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 과거 비례대표 공천을 독식했던 친노 패권주의의 인식에 갇혀있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 문 대표에게 조언한다면.

▲ 과감하게 ‘비노의 수장’을 선언하라



고 권하고 싶다. 전라도 말로 ‘짠하고, 징하게’ 당의 화합을 위해 몸을 숙인다면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것이 정권 창출을 위한 출발이다.

- 호남 물갈이, 호남 정치의 기득권 타파 주장이 거세다.

▲ 호남은 새정치연합의 정치적 뒷받침으로 ‘공천=당선’으로 연결된다. 점에 서 정치적 불이익을 당해도 된다는 논리다. 호남은 총선 때마다 물갈이도 평균 40% 정도 이뤄졌다. 지역 민심에 의한 교체가 이뤄져야 인위적 물갈이는 호남 정치 비하로 이어지며 낙인찍기가 될 수

있다.

- 신당론에 대한 입장은.

▲ 당내 리더십 부재로 내분이 계속되고 혁신위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 10월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면 신당 창당이 가시화될 것이다. 여기에 당청 간의 갈등이 심각한 새누리당의 상황도 지켜봐야 한다. 여야 상황이 맞물린다면 정치권의 지각 변동도 배제할 수 없다.

- 정권 창출의 가능성이 있다.

▲ 아직 희망은 있다. 여론조사 지지율을 합산하면 새정치연합 지지율이 45%, 새누리당 지지율이 3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당의 지지율은 낮다. 수권 능력만 키운다면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 내년 총선이 분수령이 될 것이다.

-수권 능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은

▲ 새정치연합이 큰 그릇이 되어 한다. 정권 창출을 위해 모든 세력이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친노 패권주의 청산’과 ‘호남 물갈이’가 충돌하고 있다. 상생의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 당내 갈등 치유책이 있다면.

▲ 서로를 인정해야 한다. 당내 주류 세력의 결단이 필요하다. 나눠먹기라고 비난받을 수 있지만 정치적 지분을 인정해야 한다. 먹살을 잡는 토론을 하더라도 당내 세력들의 의견을 담아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KTX연계 전남관광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

29일~다음달 31일

전남도가 지역현안인 ‘호남고속철도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과 ‘해양패가물의 효율적 처리 및 관리방안’에 대해 지역민으로부터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로 했다.

공모기간은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이다. 공모 제안은 전남도 누리집 또는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등록하거나 우편(534-700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정책기획관실 제안담당자)

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담당 부서의 심사와 제안자의 발표를 통해 시상 등급이 결정된다. 특히 제안자가 직접 제안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제안자들의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제안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최종 시상은 9월께 이뤄지며 금상 200만~300만원, 은상 100만~200만원, 동상 50만~100만원, 장려상 30만~5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특별·광역시 재원 5000억 털어 자치구 몫 늘린다

행정부, 2017년 시행

특별시와 광역시로부터 자치구에 이전되는 재원을 올해보다 5000억원 이상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특별·광역시의 자치구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 확충안을 마련, 2017년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조정교부금은 광주·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시가 소속 자치구의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고 자치구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배분하는 재원이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총 4조775억원 규모다.

행자부는 2008년 이후 도입된 5대 복지제도로 자치구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

데, 현재의 조정교부금 증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5대 복지제도로 인한 자치구의 부담 증가분은 5026억원에 이른다.

반면,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와 담뱃세 인상 등 확충된 지방세수는 특별·광역시에 쏠려, 자치구는 큰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행자부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용역연구 결과를 보면 올해 자치체의 예상 세수증대 효과 3조3500억원 중 3.3%(1조2500억원)가 서울시와 6개 광역시에 돌아가며, 이 중 85.6%(1조7000억원)가 특별·광역시 분정에 집중된다.

/연합뉴스

홍용표 장관-이낙연 지사 ‘남북평화협력사업’ 논의

정중섭 장관, U대회 경기장 방문 메르스 방역점검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지난 27일 전남도와 함경북도 간 협력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을 협의했다. 홍 장관은 이날 낮 여수에서 이 지사와 오전에 갖고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홍 장관에게 전남과 함경북도 간 인도적 지원 사업인 땅끝협력사업과 산림녹화 사업 등을 설명했다. 이에 홍 장관은 사업 추진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홍 장관과 이 지사는 전남 하나센터에서 탈북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탈북자들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올해 초 “한반도 땅끝인 전남도와 함경북도 사이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며 중앙정부의 동의를 구할 뜻을 밝혔다. 또 최근에는 함경북도의 산도, 영·유아, 불우아동 등 취약계층

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농림·축산·수산 분야 등의 민생협력 사업에까지 범위를 넓혀 호혜적 땅끝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정중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26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우려로 13일간 격리됐다가 지난 22일 해제된 보성군 주유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을 격려했다. 마을에서 생산된 블루베리, 감자 등을 시식한 정 장관은 보성 새마을금고를 찾아 메르스 피해 관련 긴급 금융지원 상황을 살피기도 했다.

이날 오전 정 장관은 다음달 3일 열리는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장 등을 둘러보고 대회 준비상황과 메르스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운장현 광주지사를 만나 광주시 현안과 건의를 들었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이희호 여사 8·15 이전 방북할 듯

내일 북측과 일정 조율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사진)가 이르면 다음 달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면담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인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은 지난 26일 “북한이 이희호 여사의 방북과 관련 오는 30일 개성에서 만나자고 연락을 해 왔다”며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우리 측에서 지난 18일 북측에 이 여사의 평양 방문을 협의하자고 연락을 했고, 북측이 어제 최종적으로 개성에서 만나자고 호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과 윤철규 김대중 평화센터 사무처장 등 남측 관계자 5명, 그리고 맹경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측 관계자 5명이 오는 30일 개성에서 만나 이 여사의 방북 일정



을 조율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북측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이르면 다음 달, 8월 15일 이전에 방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여사의 방북이 성사되면 승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방북을 하기로 사전에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방북이 성사되면 정부는 승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여사의 방북은 작년 말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여사 앞으로 보낸 친서에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3주기 때 조화를 보내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다음 해(내년에) 좋은 계절에 녀사께서 꼭 평양을 방문하여 휴식도 하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되시기를 기대한다”고 초정의 뜻을 전하면서 본격화했다. /연합뉴스

한적, 연말까지 이산가족 1만명 영상편지 만든다

사후 교류 준비사업

1만명 유전자 검사

대한적십자사(한적)는 올해 이산가족의 사후 교류를 준비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산가족의 고통화에 따른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적은 이를 위해 연말까지 이산가족 1만 명의 영상편지를 제작하고, 1만 명의 유전자를 검사한다. 영상편지는 10~13분 짜리로 안부 인사를 전하고 고향, 가정, 추억 등 일상적인 얘기, 상봉 기대 등의 내용을 담는다.

한적은 전문업체에 의뢰해 이산가족 집을 직접 방문해 영상편지를 만든다. 제작비용은 남북협력기금 20억1천여만원으로 조달한다.

한적이 2005년과 2008년 2012년, 2013년, 2014년에 연도별로 20명에서 4000명

정도의 영상편지를 제작했지만, 올해처럼 대대적으로 만드는 건 처음이다.

이와 함께 한적은 1만 명의 유전자를 검사해 검사 내용과 결과를 보관한다. 앞서 지난해에 1211건의 유전자를 검사한 바 있다.

검사 비용은 남북협력기금 9억7000여 만원으로 총당한다. 영상편지 제작과 유전자 검사는 이산가족의 사후 교류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영상편지의 경우 될 수 있는 대로 생존 때 재북 가족에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후에라도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려는 것이다. 유전자 검사는 가족관계 확인 등 사후 교류뿐 아니라 재산권, 상속 문제 등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차원도 있다.

1988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상봉을 신청한 이산가족은 12만 9688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6만 6843명(51.5%)이 생존하고, 6만 2845명(48.5%)은 고령 등으로 숨졌다. /연합뉴스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합니다

“U대회 성공개최”

2015 GWANGJU FANTASY 4 MUSIC FESTIVAL

2015. 7.17 - 8.16

에어돔 3D 판타지 쇼! 워터파크! 클럽 풀파티! 한여름밤 치맥 파티! DJ 뮤직 페스티벌(7.24-25)

주최 光州日報 | 주관 INTERCOMUNIBEX | 장소 광주시 상무지구 조각공원 옆 | 후원 NH농협 | 문의 1566-6373 | www.fantasy4.co.kr